



2002년 설치 서부지역 공공하수처리 간이중계펌프장 공유수면법 위반 파장

도민 세금 들인 시설인데 국가 소유될 판

도, 공유수면 무단 설치 시설 철거 명령에 ‘면제’ 신청
법상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시 시설 소유권 국가 등에 귀속
해수부 “귀속 주체 검토 필요”… 시 “정부 협의 후 판단”

속보=제주 서부지역 해안가에 공공 하수처리시설 십 수개를 무단 설치 해 제주시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이하 본부)가 “각 시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하수 처리난에 직면한다”며 철거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도 문제는 남아 있다. 도민 세금을 들여 설치한 공공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일 해양수산부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바다와 해안가 등 공유수면에 시설물을 무단 설치한 자가 법이 정한 예외 조건을 충족해 원상 복구 의무를 면제 받는다해도 모든 제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 불법 시설이라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국방과 자연재해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철거가 불가능 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본부가 무단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은 도로 또는 국방·자연재해 예방 시설로 볼 수 없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철거를 피할 수 있다.

단 공유수면법은 이런 예외 조건에 해당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 받더라도 해당 시설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큰 비용을 들여야하는 원상복구를 면제해주는 대신 소유권을 박탈하는 방식으

로 또다른 제재 장치를 둔 것이다.

이제 초점은 하수처리시설이 원상회복 의무 면제 대상으로 판정됐을 경우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에 모아진다.

법에는 귀속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명시돼 있어 규정대로라면 하수처리시설은 도 소유로 남겨둘 수도,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다.

만약 이들 시설을 도 소유로 그대로 남겨두면 하수 처리난 우려를 덜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유수면 무단 설치 시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 제정 취지가 모두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국가로 귀속되면 소유권을 잃게될 뿐만 아니라 도민 세금을 들여 공공시설을 설치했음에도 국가에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본부 감독 기관인 도는 원상 회복 의무 면제 시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

다. 민간이 아닌 지자체 시설이 공유수면법을 위반해 철거 의무 면제를 신청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도는 “공유수면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해수부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했고, 해수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유수면 관리청으로서 철거 명령을 내린 제주시는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될 경우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선 해수부와 협의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거 처지에 놓인 공공시설은 16개 간이중계펌프장이다. 간이중계펌프장은 각 가정에서 발생한 하수를 지표면까지 끌어 올려 정화능력을 갖춘 공공하수처리장에 보내는 시설로, 지난 2002년 서부지역 해안가 마을 공유수면 2500여㎡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점·사용 면적은 이보다 2배 이상 넓은 6200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기자



민주당 단체들 6·3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 “위성곤·문대림·송재호 후보 단일화 해야”

더민주혁신회의, 기본사회 제주본부,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 먹사니즘 제주네트워크 등 민주당 계열 단체들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 출마를 선언한 위성곤,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송재호 전 국회의원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 사진

이들은 “오영훈 도정 출범 당시 도민과 민주당원들의 기대는 뜨거웠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협치가 아닌 ‘헬렌의 정치’이며, 희망이 아닌 ‘실패한 도정’뿐”이라며 “현재의 도정에 책무를 기대할 수 없다면 도민과 함께 민주당이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을 향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며 연대와 협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오영훈 도정의 재선 도전에 맞서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오소범기자

“올해 제주도민대학 1만명 참여 목표” 도, 생활권 학습공간 확대 등 2026년 계획 확정

올해 ‘제주도민대학’이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주도민대학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9일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예산 9억원을 투입해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인문교양·직업실용·제주이해·사회통합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도는 도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배움터를 70곳에서 100곳으로, 동네캠퍼스를 5곳에

서 10곳으로 각각 늘리는 등 생활권 학습공간을 기존 82곳에서 총 11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습성과 인정 체계도 강화해 100시간 이상 이수자에게 명예학사 학위를, 300시간 이상 이수자에게 명예석사 학위를 각각 수여한다.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며 쌓은 기술과 경험을 학문적 성과로 인정하는 ‘명예직능학위제’는 지난해 1차산업에서 올해 2차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상민기자

도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컨퍼런스’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성곤·김한규 국회의원, 기본사회연구회 등과 함께 5일 오후 1시 호텔 시리우스에서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제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등 정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제주지역에서의

기본사회 구상과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서는 환경, 고용, 의료, 주거 등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지향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 어떻게 결합해 지역 순환 경제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겨울감자 수확 3일 서귀포시 표선면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겨울감자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분산에너지특구 이행추진단 본격 활동 기후부-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 기업,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분산에너지특구지역 이행 추진단이 본격적

인 활동을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이행 추진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분산특구 지정 지방정부(7개) 및 특구별 분산에너지 기업, 에너지공단, 한전, 전력거래소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고 : 2026-6호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외부전문가감사(비상임)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1. 선출대상

☐ (비상임)외부전문가감사 1명 (임기 : 2026.03.17.-2029.3.16.(3년))

2. 자격요건 등

자격요건 등

☐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4조의2(감사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 지구별수협 정관 제54조(임원의 선출) 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자.

결격사유 등

☐ 수협법 제51조제1항(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11호 및 13호를 제외한다) 및 지구별수협정관 제55조제1항(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13호 및 18호를 제외한다)

☐ 후보자 추천일 전일까지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감사를 제외한다), 대의원·어촌계장, 이 조합 지회사 및 중앙회 지회사의 상근 임직원, 다른조합의 상근 임직원 및 대의원,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직을 사하지 아니한 사람

☐ 후보자 추천일 전일까지 「수협법」제55조제4항에서 정한 실질적 경합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3.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소정양식) 1부

☐ 서약서(소정양식) 1부

☐ 비경업사실확인서(소정양식) 1부

☐ 채무의 연체유무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4. 일 정

☐ 서류접수 : 2026.02.09 ~ 2.10 (2일)

☐ ※ 접수시간은 09:00~17:00까지 조합 방문 접수만 가능

☐ 서류 및 자격심사 : 2026.02.13

☐ 후보자 추천 : 2026.02.13

☐ 선 출(2026년 제1차 대의원회) 2026.02.27

5. 기 타

☐ 후보자 신청서류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총무과) 064)-720-3104로 문의 바람이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2026년 02월 02일

제주시수협 인사추천위원회

추 모

제주 4·3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주4·3 동북리희생자
합 동 위 령 제

올해는 제주 4·3의 발생으로 동북리주민이
희생된지 77주년 성상을 맞습니다.
동북리에서는 제주 4·3으로 인해 주민 130
여명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영령들의 원혼
을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평화를
함께 일구는 동북리4·3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4·3유족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2026년 2월 6일(금) 오전 11시 30분

장 소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4·3희생자 위령탑 공원(937번지)

제주4·3동북희생자유족회

대한민국해병대ROTC중앙회

2026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중앙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2026년 2월 7일(토)

☐ 1부 : 정기총회 17:00

☐ 2부 : 회장 이·취임식 18:00

장 소 : 메종글래드 제주
(1층 컨벤션홀)

대 상 : 전 중앙회원

연락처

- 사무총장 임철중(20기) ☎ 010-6643-3264

대한민국해병대ROTC중앙회
회 장 고 지 수

그랜드
보청기

‘2026년 병모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진형 귀속형 보청기

충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삶을 돌 돌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정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서시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